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

2021년 업무추진계획

2021. 3. 8.





목 차



I. 4년 추진성과와 평가	1
II.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6
III. 2021년 핵심 추진과제	8
IV. 쟁점(갈등) 과제 관리방안	22
V.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4

【붙임1】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붙임2】 4년간 성과/'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I. 4년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① 코로나19 신속대응

□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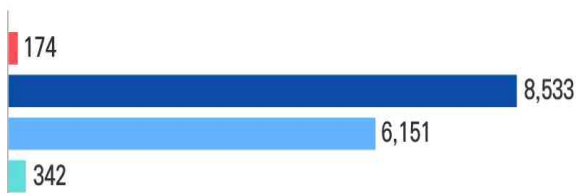
- ①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20.2월~) 및 **범정부 지원 총괄**(중대본 2차장)
- ② **해외 교민 국내이송 지원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 총괄, 생활치료센터 확보·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등 새로운 방역체계 전담 운영
* 자치단체 자가격리 총괄·지원을 위한 ‘자가격리 전담반’ 구성·운영,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및 이탈자 대상 ‘안심밴드’ 도입·운영 등
- ③ **범정부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조직·인력 확충***
* 역학조사관 보강(+87명), 질병관리청 승격 및 보건의료 전담차관 신설, 중수본·방대본 등 인력 특별지원(중수본 76명, 방대본 75명, 중대본 16명, 치료제·백신개발 지원단 18명 등 **185명**)
- ④ **감염병 최초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및 재난대책비(4천억원) 지원**
(‘20.3월),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운영** 등으로 급속한 지역확산 억제
*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 ⑤ **전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3조원 신속 지급***
* 예산안 국회 통과(‘20.4.30) 직후 카드사 연계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 개시(5.4.), 4주 내(5.4.~5.31.) 2,132만가구 지급 완료

□ 정책효과

①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방역 선도국가 평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명)

■ 한국 ■ 미국 ■ 영국 ■ 일본



(3.2.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명)

■ 한국 ■ 미국 ■ 영국 ■ 일본



(3.2. 기준)

②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소비심리 반등* 및 국민생활 안정 기여

*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 (‘20.4)73.8 → (‘20.5)88.3 → (‘20.6)82.6
소비자심리지수 : (‘20.4)70.8 → (‘20.5)77.6 → (‘20.6)81.8

②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 추진실적

- ① 중앙-지방의 협업을 통한 **종합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자부-안전처를 통합한 **행정안전부 출범**(‘17.7월~), 비상시 **국가재난관리체계**(청와대-부처-현장기관 간 지휘·조정·통제) **확립**(‘18.9월)
- ②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확충*** 및 **소방직 국가직 전환****(‘20.4월)
 - * 확충실적(‘17~‘20년 누적) : (‘17)1,500명 → (‘18)5,100명 → (‘19)9,639명 → (‘20)13,817명
 - **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18)20% → (‘20)45%
- ③ 근본적·체계적 풍수해 대응을 위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20.11월)하고, **25년 만에 재난지원금 현실화***
 - * (인명) 사망 10→20백만원 등 / (주택) 전파 13→16백만원, 침수 1→2백만원 등
- ④ 범정부 재난안전 예산 지속 확대*, 법적 재난범위에 폭염·한파·미세먼지 포함
 - * (‘17)14.3조원 → (‘18)15.2조원 → (‘19)15.9조원 → (‘20)17.5조원
- 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인프라(CCTV, 신호등 등) 확충과 초등학교 통학로 조성, 「**어린이안전법**」* 시행(‘20.11월) 등 어린이 안전수준 향상
 - * 어린이집·유치원 등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종합계획 수립 등 어린이 안전관리 기반 구축

□ 정책효과

- ① 재난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범정부적 재난 대응역량 향상
- ② 소방공무원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강화*
 - * 신고 후 소방차량 7분(골든타임) 이내 도착률 : (‘16)61.1% → (‘20)65.7%
 - 소방관 1인 지역대(‘나홀로소방대’) 수 : (‘16)57개 → (‘17)20개 → (‘18~‘20)0개
- ③ 교통사고 사망자 지속 감소 추세 등 일상생활 속 안전 강화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



③ 자치분권 기반 확충

□ 추진실적

- ❶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월)으로 새로운 자치제도 전면 도입(20개 과제* 제도개선)

*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연령 완화(19세→18세), 보충성 원칙 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

- ❷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지역교통 등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제 도입(「경찰법」 개정, '20.12월)

- ❸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2월)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를 자치단체로 일괄 이양

* (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사무,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사무, (해수부) 지방 항만시설 개발·운영 관련 사무 등

□ 정책효과

- ❶ 자치분권 관계법령 제·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틀 마련

- ❷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④ 1단계 재정분권 및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

□ 추진실적

- ❶ 1단계 재정분권 완성

- 지방소비세율 10%p 단계적 인상*, 지방소비세 인상분 배분 시 지역별 가중치 적용 등 재정균형장치** 마련

* 부가가치세액(국세)의 (~'18)11% → ('19)15% → ('20)21%

** 지역별 가중치 적용(수도권:광역시:도=1:2:3), 10년간 수도권 세수의 35% 지역 상생발전기금 출연

- 3.6조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

*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중심(광역 2.8조원, 기초 0.8조원)

② 지역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 확장적 지방추경 편성, 효율적 지방재정 집행 등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

※ 추경규모(조원) : ⁽¹⁶⁾40.7 → ⁽¹⁷⁾45.0 → ⁽¹⁸⁾40.1 → ⁽¹⁹⁾54.7 → ⁽²⁰⁾83.7

집행규모(조원) : ⁽¹⁶⁾287.9 → ⁽¹⁷⁾300.9 → ⁽¹⁸⁾315.9 → ⁽¹⁹⁾366.0 → ⁽²⁰⁾432.5

③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지역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회복 지원**

* 발행규모/국비지원 : ⁽¹⁸⁾0.4조/100억원 → ⁽¹⁹⁾2.3조/884억원 → ⁽²⁰⁾9.6조/6,69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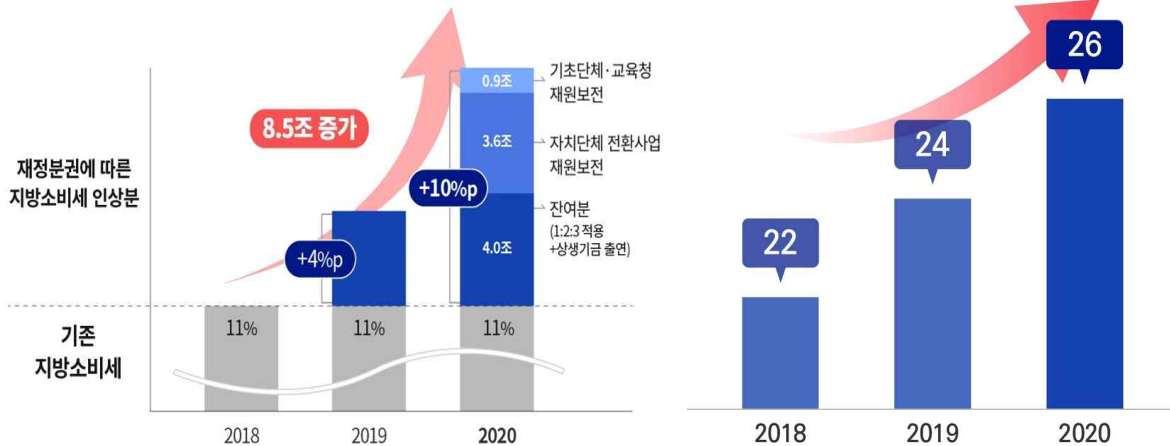
** 지역일자리 수 : ⁽¹⁸⁾3.8만명 → ⁽¹⁹⁾8.0만명 → ⁽²⁰⁾35.6만명

□ 정책효과

① 세 부담 증가없이 지방재정 획기적 확충(年 8.5조원),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¹⁸⁾78:22 → ⁽¹⁹⁾76:24 → ⁽²⁰⁾74:26)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율(%)



② 국고보조사업 전환으로 지방재정 자율성·책임성 강화

③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으로 지역소비 활성화,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지역경제 회복 기여

⑤ 정부혁신 추진

□ 추진실적

① '광화문 1번가'(⁽¹⁷⁾5월~) 활성화, 국민이 예산수립·정책평가·조직진단 등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확대

② 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 모바일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국세납세증명 등 100여종 발급),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과태료 한 번에 확인·납부 등

③ 정부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정부24’ 개통(‘17.9월~) 및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상속, 출산, 임신, 전입, 돌봄, 보훈, 꿈청소년 등 7종 패키지 서비스 제공

④ 공개 가능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추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6월) 등 데이터 경제·행정 활성화 기반 마련

* (공공데이터 개방) (‘16)2.1만개(누적치) → (‘20)9.8만개 테이블(누적치)
(공공데이터 활용) (‘16)188만건 → (‘20)2,084만건

□ 정책효과

① 국민참여 중심의 정부혁신으로 정부신뢰도 및 투명성 향상



② 데이터경제 활성화, 온라인 참여 대폭 확대 등으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 OECD 디지털정부평가 1위(‘20년), UN 전자정부평가 참여지수 1위, 발전지수 2위(‘20년), OECD 공공데이터개방평가 3회 연속 1위(‘15년·‘17년·‘19년)

2. 보완할 점

-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출현 등 재난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비 역량 강화 필요
- 지역소멸 위기 심화, 지역 간 격차 지속 확대, 지역사회 갈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데이터기반 행정 본격 시행을 위해 추진체계·시스템을 확충하고 비대면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인프라 개선·활성화 지속 필요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상시화

- 코로나19가 지속되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감염병* 등 신종·복합재난이 더 자주, 강하게 발생할 전망

* 발생연도/세계사망자 : (사스) '03 / 774명, (메르스) '12 / 866명, (코로나19) '19 / 약 254만명

-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 증가로 전통적 재난도 점차 대형화·복잡화

* 연평균 강수량 : (1912~20) 1,156mm, (2010~19) 1,264mm, (2071~2100) 1,480mm(예측)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 확대

- 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소상공인·저소득층 피해 가중, 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가*

*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 80.1%,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자치분권 확대 필요성 74.8% 등(분권위 여론조사, '20.10월)

-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등 사회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치단체의 위상 제고

□ 비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비대면·디지털 기술 적용 확산

※ 공공·민간 재택근무 및 화상회의 증가, 온라인 수업 전면 실시, 배달·인터넷 쇼핑 급증

- 각국 정부는 데이터·5G·AI 등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 돌입하고, 디지털 정부 및 공공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민 눈높이 상승

※ (한) 디지털 뉴딜에 58.2조원 투자('20.7월),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20.11월)

(미) 5G 전국 통신망 구축을 위한 '5G 업그레이드 명령' 의결('20.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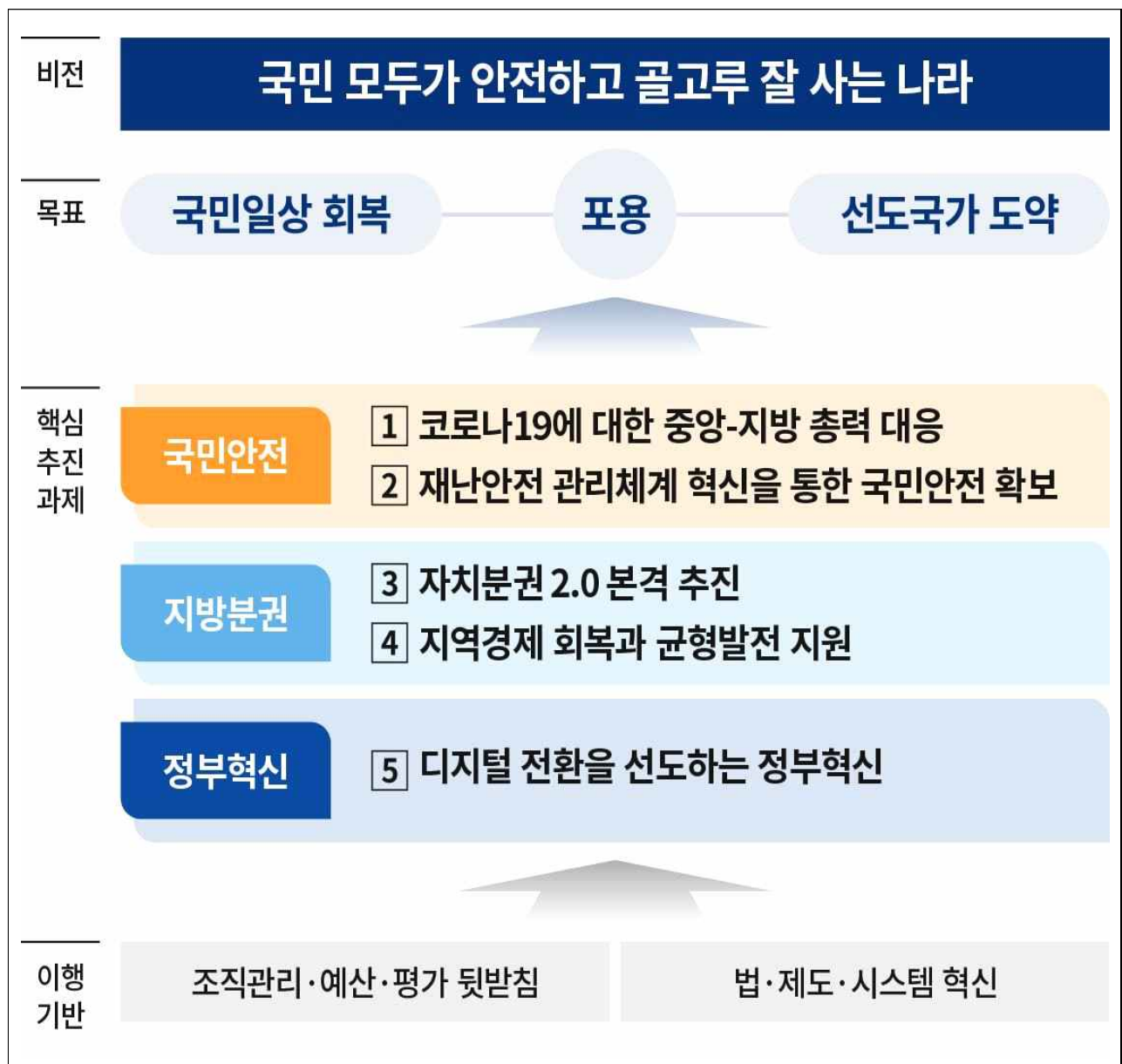
(중) 5G·데이터 등 新인프라에 '25년까지 1.2조위안 투자('20.3월)

2. 업무추진 방향

□ 기본방향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새로운 재난 환경에 대응하여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
- 자치분권 2.0의 내실 있는 추진과 2단계 재정분권 완수를 통해 지방의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지원
-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혁신성과 창출

□ 비전 및 핵심 추진과제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① 코로나19에 대한 중앙-지방 총력 대응

□ 개요

-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의 쉼 과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의 참여방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직·인력·재정 등 총력 지원
- 코로나19 백신이 실제 접종까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현장 대응체계 확립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선제적 방역조치 강화 】

- 자치단체가 감염원을 조기 발견·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 이동형 검사소 등 신속하고 다양한 검사활동 지원
- 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확진자의 80%인 경증환자의 가용병상을 안정적으로 운영
 - 병상 부족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 입소현원의 1.5배 이상을 추가 수용 가능한 예비시설 사전 확보, 유사시 신속 가동
- * 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 정원 5,050명, 현원 1,697명, 예비시설(정원) 6,074명(3.4. 기준)
- 자가격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전보호 앱 기능 개선, GIS 상황관리, AI 콜센터 활성화 등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
- 참여방역 구현을 위해 자치단체·안전관련단체 등의 온라인 홍보 강화
 - 집단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효과적 관리방안에 대한 국민·전문가의 아이디어 발굴·정책화
- * (정부합동점검) 식당·카페, 유흥주점·노래방,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
(부처별 점검) 종교시설, 요양시설, 교정시설 등 취약시설 중심
(자치단체 자체점검) 자치단체별 상황에 맞는 방역수칙 이행상황 점검

【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한 총괄 지원 】

-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자치단체별 전담조직 구성(1월~)을 지원하고,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역할 수행
 - * (시·도, 시·군·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
- 현장에서 백신의 유통·보관·접종 및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 국민의 편리한 백신접종을 위해 디지털 역량·자원 최대한 활용
 - 백신접종 시기·장소 등 개인별 백신접종 예약정보를 국민비서로 선제적 안내(4월~)
 - 백신접종기관, 관련 통계 등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공공앱·웹 및 민간 메신저·지도앱 등에서 활용하도록 지원
-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지역밀착형 1:1 맞춤형 홍보

【 전방위 대응 지원체계 보강 】

-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접종 재정소요, 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곳에 신속한 특별 재정지원(1월~)
-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기준인력('21년 1,066명)의 신속한 충원*과 자치단체별 여건 및 업무특성에 맞는 탄력적 인력운영** 지원
 - * 간호직 등 경력채용 조기 실시, 백신접종 등 추가인력 필요시 수시배정 등
 - ** 시·군·구 인력의 보건소 등 지원근무 시 별도정원(장기근무)·한시정원 활용 지원
- 시·도별 지역전담책임관(국장급)을 지속 운영(1월~)하여 지역의 애로·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해소 지원

□ 기대효과

- 중앙-지방의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원활한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국민의 일상회복 지원

2 재난안전 관리체계 혁신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 개요

- 기후변화, 신종 사회재난 등 재난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 증가에 따라 재난안전 관리체계 혁신 추진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

- 위험·핵심시설을 중심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범정부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확대*

* 학교, 전통시장, 소방 등 25개 타 부처 소관 안전정보도 연계하여 공개

- 급경사지·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예방사업을 확대(⁽²⁰⁾4,970억원→⁽²¹⁾5,915억원) 하고, 부처별 사업을 마을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연계 추진

*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펌프장(행안부), 하천(국토부), 하수도정비(환경부)를 공동 시행

-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 조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신기술 인증 및 안전산업정보포털 구축 등 재난안전기업 지원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 재난안전산업 진흥 중장기 로드맵 수립

- 범정부 재난안전예산을 확대(⁽²⁰⁾17.5조원→⁽²¹⁾20.6조원)하고, '22년 투자 방향 제시 및 사전협의*·사업평가로 사업효율성 제고

* 각 부처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및 평가결과 기재부 통보(매년 6월)

- 행정계획·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 내실화*

* 협의내용 미반영 시 제재 강화, 협의내용의 실제 설계·시공 반영여부 상시 점검

【 현장 중심의 신속한 재난대응 】

- ICT 기술을 활용한 협업기반의 365일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가동

스마트 상황관리	협업형 상황관리	선제적 상황관리
IoT, CCTV를 활용한 정보 수집, GIS 상황판 활용	13개 부처 95명 합동 근무 및 상황실 간 연계	예비특보 시 주민대피, 사전통제 등 선조치

- 소방·경찰·해경 등 기관 간 재난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
* (기존) 기관별 통신체계 사용으로 소통 제약 → (개선) 단일 통신망으로 음성·영상 등 공유
- 지하차도 및 둔치주차장 침수에 대비한 자동 통제시스템* 구축
* 일정 수위 도달 시, 진입로(출입로)를 우선 자동 차단하고 차주(관리자) 등에게 전파
- 신속하고 책임있는 현장대응을 위해 대피명령 발령권자 확대(자치
단체장·지역통제단장→경찰관서장 포함) 및 단계 세분화(명령→권고/명령/해제)
- 재난현장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읍·면·동 단위 재난대응역량* 강화
* 안전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주민대피시설 지정, 가구별 예·경보 시설 구축 등

【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복구 지원 강화 】

-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소요기간 3주→1주) 제도화 및 선포기준 정비*
* 국고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군·구의 읍·면·동에 대해서도 선포 가능
- 시설복구에 공동체 회복 등 재생까지 포함하는 종합복구제도*로 확대
* (시설복구) 공공시설 → (종합복구) 공공시설 + 이주대책 + 안전·커뮤니티 시설 등
- 적시·적소에 재난관리자원이 동원될 수 있도록 시·도별 지역통합
자원관리센터*를 설치하고, ICT 기반 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광역거점센터 17개소, 개별비축창고 229동
-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상향하고, 부처별 재난안전의무
보험에 대한 평가 도입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23년)
* 정부지원율 : (주택·온실) 52.5% → 70% / (소상공인) 59% → 70%

【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8,859개소),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32개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사업 중점 추진(⁽²⁰⁾1,274억원 → ⁽²¹⁾1,988억원)
 - 「어린이안전법」 시행(20.11월)에 따른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 수립,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 「보행안전법」 개정(20.12월)에 따른 보행안전지수 개발, 보행환경 정책 연구센터 지정 및 국가 보행안전 기본계획(22~26) 수립
- 생활 속 위험요인* 개선에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신문고 활성화
 - * 코로나19, 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폐기물, 교통위반, 건설현장 위험 등
- 민·관 협업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

【기후변화 등 신종 위험 대비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방안* 추진 및 법·제도 정비**
 - * 급경사지 등록 대폭 확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처리가능 강수량) 상향 등
 - ** 5년 단위 가뭄종합대책 수립, 지역별 폭염대책 수립·제출 의무화 등
- 재난안전 관리체계 중·장기 발전방안 등 미래 재난관리전략 수립 추진
- 신종감염병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한 범정부 재난안전 R&D 투자 지속 확대(⁽²⁰⁾1조2,810억원 → ⁽²¹⁾1조8,599억원)
- 자치단체에 사회재난 위험요인 자체 발굴 및 대응 권한을 부여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가칭}「사회재난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비상대비자원 통합DB 구축(~23년), 민방위 경보 발령·전파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한 비상대비태세 강화
 - * 군 탄도탄 관측시스템 - 민방위 경보시스템 자동연계로 경보발령 시간 단축(3분→10초)

□ 기대효과

- 각종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복구체계 가동으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수준 향상 및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③ 자치분권 2.0 본격 추진

□ 개요

- 단체·단체장 중심(자치분권 1.0)의 제도자치에서 주민·의회 중심(자치분권 2.0)의 생활자치로 발전
- 과감한 지방자치 영역의 확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

- 주민 직접참여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3법」 제·개정 추진
 -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 * ①「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단체장 경유 폐지, 인구규모별 청구요건의 차등적 완화, 1년 내 심의·의결 의무화 등) 추진
 - 주민 직접참여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의 제도적 요건 완화
 - * ②「주민소환법」 개정(주민소환 개표·확정요건 완화(1/3→1/4), 청구요건 완화 등) 추진
 - ** ③「주민투표법」 개정(주민투표 대상확대, 개표요건 폐지, 확정요건 완화(1/3→1/4) 등) 추진
-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본격 도입방안* 마련 및 법제화 추진
 - * 시범실시 성과를 토대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화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마련
-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3법」* 제정 추진
 - * ①「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 ②「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③「마을기업 육성 지원법」
 - 주민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자치단체·공공기관·시민단체 등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확산

【 지방의회 의정 역량 제고 】

- 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 * 채용시험 집행기관 위탁, 의회 간 또는 집행부-의회 간 인사교류 등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
 - * 직무범위·직급·자격요건·배치방안 등 마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개정
-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 사무인력에 대한 체계적·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가칭}‘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추진
-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의원 징계 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 지방의회의 책임성·윤리성 강화

【 보충성 원칙에 기반한 자치영역 확대 】

- 주민 삶과 밀접한 사무를 대상으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여 국가사무를 과감히 이양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및 기관위임사무를 중심으로 신규 지방이양사무 집중 발굴
-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치권 제약법령을 정비하고,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개선*
 - * 제·개정 법령안에 자치단체 의견 반영 여부 제공(반기별) 등
- 「지방자치법」상 3가지 고려요소*에 따라 특례부여가 가능한 시·군·구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정기준과 연계한 특례부여 범위 연구 추진
 - * ①실질적인 행정수요, ②국가균형발전, ③지방소멸위기
- 자치경찰제(1월 시행)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조직 구성, 조례 제·개정, 예산편성 등 시범운영 지원(~6월)
 - 치안행정-지방행정 간 연계,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치안정책 수립 등 지역 중심의 자치경찰제 발전방향 마련

【 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 강화 】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자율성 제고
 - 부처별로 추진 중인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 개발 및 확산
 - * (예) 사회적농업^{농식품부}+도시재생^{국토부}+통합돌봄^{복지부}+공공서비스^{행안부} 등 다부처 사업을 연계하여 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는 부처합동 컨설팅 등 지원
- 새로운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의사결정·집행구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제도 마련
 - 기관구성 유형, 단체장 선임 방식, 의회·단체장 권한배분, 변경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
- 행정경계를 넘어서는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둘 이상의 자치단체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 광역경제권 구축, 공공서비스 공동제공 등 유형별 모델을 개발하고, 규약 제정, 사무위임, 조직 구성 등 설치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
 - ※ 사도 통합 등 지역의 행정체제개편 움직임에 대응하여 통합절차제도 선제적 연구병행

【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활성화 】

- 대통령-시·도지사가 함께 참여하여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22.1월~)
 - * (부의장) 총라·시도지사협의회장, (구성원) 사·도지사, 4대협의체 대표, 기재·행안·교육부장관 등
- 지역 내 갈등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지역여론 모니터링·분석을 통한 사전적 갈등 관리 및 갈등조정기구의 전문성·권한 강화*
 -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중앙-지방) : 민간위원수 확대(4→10명), 공공기관에 당사자적격 부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지방-지방) : 민간위원수 확대(6→10명), 분야별 전문가 위촉

□ 기대효과

- 자치단체의 강화된 자율성·책임성을 기반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 자치단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

4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지원

□ 개요

-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
- 지역균형 뉴딜, 인구감소·섬 지역 집중 지원 등 균형발전 추진 및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코로나19 대응 신속한 경제회복 지원 】

< 지역소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 지역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속 발행*
* '21년 총 발행규모 15조원 중 1분기 내 30%(4.5조원) 발행·판매 추진
- 고용·방역 공백을 방지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약 9.4만명)
 - 비대면·디지털 청년일자리, 생활방역일자리, 백신접종 행정지원 등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 지역상생의 발판인 '착한 임대인 운동'을 공공부문이 적극 선도*
* 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납부유예·인하, 연체료 경감, 지역상권 상생조례 제정 독려 등
-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제* 및 금융** 지원
* 농어업·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감면 등
** 새마을금고 긴급자금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등

< 확장적·적극적 지방재정 운용 >

- 코로나19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 지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회계 간 여유재원의 예탁·예수 확대, 자치단체 예산 편성정보 공유 및 컨설팅 확대 등
- 대규모 투자사업별 관리체계 확립 등 상반기 신속집행 중점 추진*
* 상반기 집행목표 : ('17) 56.5% ('18) 57.0% ('19) 58.5% ('20) 60.0% ('21) 60.0%

【 지역맞춤형 균형발전 추진 】

< 지역균형 뉴딜 성과 조기 창출 >

-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지역사업 발굴 및 추진 지원
 - 기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 * 지역균형 뉴딜 분과 운영,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뉴딜펀드 투자 유도 지원 등
 - 지역별 대표사업(signature), 초광역사업에 대한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
 - * (행정)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간소화, 전담인력 지원, 공모사업 균형발전도 가점부여 등
 - (재정)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활용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제공 등
- 뉴딜 추진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 발굴·해소 및 관련 법령* 정비
 - * 지방공기업 뉴딜사업 관련 출자한도 상향(「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등
- 지역균형 뉴딜의 체감도 향상(상반기)과 성공사례 확산(하반기)에 중점을 둔 자치단체 중심의 대국민 집중홍보 추진

< 지방소멸 위기 대응 >

- 범정부 차원의 지방소멸 위გი지역 지원체계 구축
 - 지방소멸 지원사업, 각종 특례 등을 규정하는 법·제도적 기반 및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마련
 - 공모사업 시 지방소멸 위გი지역에 일정비율 우선배정 제도화 추진
-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일자리·공동체 사업 추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추진(2.6만명), 청년마을 확산(⁽²⁰⁾1개소→⁽²¹⁾12개소) 및 정착지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확대(⁽²⁰⁾16개팀→⁽²¹⁾100개팀)
-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 섬 지역 정주여건 및 발전 지원 >

-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과 함께 육지-섬 간 균형발전 추진
 - 섬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전략 수립 추진*
 - *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여 섬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체계적 연구 수행
-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11년~'25년)상 주민체감 지원사업* 추진
 - * 병원선 신규 건조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 및 자율성 확대 】

< 2단계 재정분권 적극 추진 >

- 코로나19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 재정책확충을 지원
 -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국가-지방 간 합리적 기능 재조정
 - 1단계 재정분권 추진결과 분석을 통한 제도적 보완 병행* 추진
 - *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보완 등으로 기초자치단체 재정책확충 및 광역 간 형평성 제고
 - 지방사업으로 전환된 기존 국고보조사업(3.6조원)의 보전기한('22년) 이후 관리방안 마련
 -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정부안) 마련(6월) → '22년 시행 목표로 추진
-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재정제도 개선 병행
 - 상환도래 지방채에 대한 차환채 별도한도 한시인정(25%→100%, '21년 限)
 - 이월예산('19년 33조원)의 연도 중 불용처리 후 세입편성 근거 마련(「지방재정법」 개정)
 - 경비·청소용역 입찰 등 지방계약 관련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 지방세입 확대 및 관리 강화 >

- 민생경제 지원 및 지방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지방세 감면 재설계*
 - * '21년 일몰도래 감면 125건(학교·임대주택·항공기 등), 3.9조원('19년 결산 기준)
- 외부불경제 효과를 완화하고, 지방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신세원 발굴*
 - *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세율 인상, 방사성폐기물·시멘트 신규과세 등
-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지방세 탈루예방에 활용*
 - * 불법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 등 정보제공 대상기관에 행안부 추가(5월)
-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 기반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 구축
 - *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지원, 인공지능 활용 주민 맞춤형 정보제공, 지방세 납부편의 개선 등

□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일상 조기 회복
-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자립적 발전 지원

5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 개요

- 디지털 정부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의 혁신성과 체감 극대화
- 데이터기반 행정 원년으로 과학적 정책결정 및 일하는 방식 혁신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 추진 】

-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개방 2.0’ 추진
 - 민간 수요가 많은 인공지능(AI)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 중점 개방*
 - * 자율주행, 헬스케어, 사업자등록정보, 백신접종 등
-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분석 및 정책활용이 가능한 체계 구축
 -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신설
 - 주요 보고서의 데이터 분석·활용 의무화, 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재난 등 선제적 예방 및 민원·정책 모니터링 강화
-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행정문서를 개방형포맷(ODF)으로 단계적 전환
 - 결정문, 입찰공고문, 용역보고서 등 민간 활용도가 높은 것부터 선별·추진

【 데이터기반 지능형 서비스 확대 】

-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알아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 개시(3월~)
 - * (안내서비스) (3월) 국가장학금·교통과태료 등 7종 → (12월) 38종으로 확대
 - (상담서비스) (5월) 공공시설예약·경찰민원 등 11종 → (12월) 23종으로 확대
- 국민이 수혜서비스를 한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도입*
 - * (21.4)중앙부처 서비스(300여종) → (21.12~)자치단체 확대 → (22)공공기관 확대
- 생애주기 원스톱 통합신청 서비스의 지속 확대(20)7종→(21)14종→(22)16종
 - 개인별 서비스를 취업,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까지 확대
 - ‘기업생애주기 서비스’ 도입 컨설팅·정책자금 등 창업에서 폐업까지 패키지 지원

【 디지털 증명 시대 본격 개막 】

- 모바일 기반의 신분증 및 전자증명서 도입
 -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
 - * (‘21)공무원증·운전면허증 → (‘22)장애인등록증 → (‘23)국가유공자증 등 지속 확대
 -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여 3無(무방문·무대면·무서류) 민원 구현
 - * (‘20)주민등록등·초본 등 100종 → (‘21)가족관계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300종 이상
- 행정·공공기관이 정보주체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행정·공공·민간기관)에게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 * (증명서 항목) (‘10월) 주민등록등·초본, 국세납세증명서 등 90종 → (~12월) 140종으로 확대 (꾸러미 형태) (‘10월)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은행신용대출 등 24종 → (~12월) 35종으로 확대
- 안전성이 검증된 민간인증서를 공공웹사이트에 적용 개방*
 - * (‘1월) 연말정산·정부24·국민신문고에 카카오 등 5개 인증서 적용 → (~12월) 전면 적용 개방

【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공공서비스 강화 】

-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무료인 점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오프라인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고령자를 위한 민원수수료 감면 등 추진*
 - * 「민원처리법」에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큰 글자 민원서식 확대 등
- 장애인이 민원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新무인 민원발급기 보급 등 추진*
 - * 휠체어를 고려한 민원발급기 높이 하향, 전용창구 마련, 음성·수화서비스 등
- 외국인 민원신청 과정의 언어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 * 외국어 제공 민원서식 확대, 민원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국민 참여·협업의 질적 도약 】

- 각종 창구를 통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연계·공유
 - 부처·자치단체의 참여창구를 ‘광화문1번가’와 연계하고, 제시된 국민 의견에 대한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책화 및 피드백 제공

-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청원법」 개정('20.12월)에 따른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및 시행령 제정
 - 온라인 공청회로 오프라인 공청회를 대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행정절차법」 개정)
- 현장 협업수요를 파악·연결하는 '협업이음터'로 협업 성공사례 창출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역량 강화 】

- 정부 조직·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 및 당면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 신종 감염병 등 재난 분야 기구 보강, 에너지 분야 차관 신설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 등 추진
 - 데이터 분석·활용 촉진을 위한 부처별 데이터 전담인력 지원
- 본격적인 비대면 업무환경 시대에 대응하여 원격행정 기반 구축
 - 영상회의 시스템을 PC 중심에서 모바일+PC로 전환*
 - * (~10월) 모바일 영상회의 시스템 개발 → (12월) 모바일 영상회의 시범운영
 - 무선·서류없는 업무환경 구현을 위한 5G 국가망 구축*
 - * ('21)과기정통부·세종시 등 5개 기관 실증사업 → ('22)5G 국가망 단계적 확산
-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통합하여 데이터 공유·활용 촉진 및 보안성 강화
 - * (~'25)정보시스템(정보자원 18.5만대)을 클라우드로 단계적 전환
- 디지털혁신 선도국가로서 국제협력 강화, 혁신성과의 국·내외 공유*
 - * 열린정부파트너십 글로벌서밋(100여개국/12월), 디지털 네이션스 운영위원회(10개국/6월), 정부혁신박람회(11월)

□ 기대효과

- 데이터기반 행정으로 정책 및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정부신뢰도 향상

IV. 쟁점(갈등) 과제 관리방안

1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

□ 개요 및 현황

- (개요) 경찰권 분산,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부처합동 지원 및 발전방향 마련
- (현황) 17개 시·도 '자치경찰준비단' 구성 완료, 행안부는 표준조례(안) 마련 등 시·도 조례 제·개정 지원

□ 쟁점 사항

- (제도정착)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발생
 - ⇒ 시·도별 추진현황 관리, 시·도 건의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관계 기관(경찰청) 등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제시
- (예산지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치단체의 국고지원 요구
 - ⇒ 재정지원 대상·규모·방식 검토를 위한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 참여, 경찰청과 기재부의 재정지원방안 협의 지원

□ 향후 조치계획

- (제도정착) 국내·외 자치경찰제 사례 분석 등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과의 연계방안 연구를 통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마련
- (예산지원) 자치분권위원회 주재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를 통해 지원방안 논의
- (운영지원) 시도별 임시회 일정에 맞춰 기구·정원 조례* 입법예고 및 공포·시행,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실무운영 지원

* 자치경찰 관련 사무기구·정원 조례 참고자료 및 기준인력 통보(1.18./2.8.)

2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통합 지원

□ 개요 및 현황

- (개요)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구성원 간 연대·협력 증진 도모
- (현황) 과거사, 다문화, 공공정책 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구성원 간 갈등이 지속되어 사회·경제적 비용 초래

□ 쟁점 사항

- (과거사) 1기 진화위 활동('05~'10)이 종료되었지만, 과거사 완전 해결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 제기
 - (4·3사건) 진상규명을 넘어 적절한 보상기준 마련 요구
 - (여순사건) 2기 진화위 활동과 별개로 독자적 진실규명 창구 요구
 - (5·18민주화운동) 보상금 수급 대상·범위 등에 대한 재조정 요구
- ⇒ 4·3사건의 구체적 보상기준 마련(연구용역) 및 진상조사, 여순사건,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제·개정 대응
- (지역사회) 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화된 구성원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프로그램 필요
- ⇒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에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 체육활동 등 주민과의 소통·교류 지원, 자원봉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
- * 커뮤니티센터·카페 등 지역주민 소통·교류공간, 풋살장·쉼터 등 문화·편의시설
- (정책갈등) 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주민의 목소리가 다양해짐에 따라 중앙-지방, 자치단체 간 갈등 빈번
- ⇒ 주요 공공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앙-지방 간, 자치단체 간 갈등을 선제적으로 분석·관리, 자율협의 지원 및 위원회 조정

□ 향후 조치계획

- (과거사) 과거사 관련 법안 제·개정을 위한 국회논의 적극 지원
- (지역사회)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소통·교류 지원(연중)
- (정책갈등) 갈등분석(상시), 위원회 운영강화(법률개정안 국회제출, ~6월)

V.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국민 안전



112·119 구분 없이 앱 하나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112·119 긴급신고앱을 통합한 긴급신고통합앱 서비스 개시
- 경찰·소방에 접수되는 내용을 긴급신고 중심으로 우선 처리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으로 높은 층도 화재 걱정이 줄어듭니다.

- 그간 고가사다리차가 없던 7개 시·도에 차량 도입
-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확대로 노후소방장비 보강



일상 속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됩니다.

- 어린이이용시설(어린이집·학원 등)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확대('20년 3,827개소 → '21년 8,859개소)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소방·해경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 재난시 음성·영상 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보다 신속한 재난 상황 대응 가능



온라인으로도 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가 가능해집니다.

-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인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도입
-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일자리로 살림살이가 나아집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20년 9.6조→'21년 15조)
- 지역일자리 10만개 창출



다양한 정부 보조금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300여종)·자치단체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신청하는 서비스 제공



한 번의 신청으로 임신·창업 등에 따른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창업·노후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규 실시('20년7중→'21년14중)
- 간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전국 확대('20년 20개 자치단체→'21년 전국)



운전면허증과 공무원증이 내 핸드폰으로 들어옵니다.

- 모바일로 운전면허증·공무원증을 편리하게 발급받고, 다양한 분야(금융거래·민원신청)에서 안전하게 신원증명 가능



‘국민비서’로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 때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생활형 정보(민방위교육·운전면허갱신 등)를 민간채널을 통해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행정서비스 24시간 민원상담을 제공

국정과제	추진현황	향후계획
③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사정리법」 개정('20.6), 시행('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사정리준비기획단 설치('20.7) - 진화위 출범, 과거사 사건접수 재개('20.12) ○ 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심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사건법 시행령 개정('17.12) - 희생자유족 6차 추가신고 접수('18.1~'12), 21,696명 전원 심의·결정('18.~'20.6)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대전시 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17.7), 업무협약 체결('18.1) - 총사업비 조정(295→402억원/'19.12) - 국제설계공모('20.9), 당선작 선정('20.12) ○ 화해와 치유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민주인권기념관 총사업비 조정(259→310억원/'20.9), 기본·실시설계('20.1~) -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광주/제주) -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확대* * 범위/대상 확대(타라와 해남도 등/노무자 유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된 미해결 과거사 사건 조사 재개('21.상~) ○ 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7차) 접수('21.상) ○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기본·실시설계('21.상~) ○ 민주인권기념관 공사('21.상~) ○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확대('21.상~, 예산+337백 등) ○ 타라와·사할린 유해봉환, 사할린 한인묘 실태조사('21.상)
⑤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유홍준 前 문화재청장) 브리핑*('19.1)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이후 장기적 사업으로 검토 ○ 기관장 일정 통합공개 확대('19.12) ※ (기존) 각 부 장관 등 28명 → (확대) 17개 청 및 17개 시도 기관장 일정 추가 공개 ○ '주요인사 일정공개 운영지침' 배포('2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상황('20.11 착공)에 맞춰 이전계획 수립 ○ 기관장 일정공개 지속관리 추진(계속)
⑥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발전위원회(총리소속) 출범('20.8) ○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20.7) ○ 1365자원봉사포털 전면 개편('20.4) 및 타기관(복지부 등 16개기관) 실적연계 확대 ○ 기부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20.7) ○ 민간중심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법」 개정안 국회제출('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지원('21~) ○ 「자원봉사법」 개정추진('21)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 추진('21)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21.1 개통 예정)

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 국민알권리 보장 및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법」(‘20.12) 및 「대통령기록물법」 개정(‘20.12)	○ 정보공개시스템(~’21) 및 기록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22)
	○ 온라인·공개청원이 가능하도록 60년 만에 「청원법」 전부개정(‘20.12)	○ 온라인 청원시스템 BPR/ISP 실시(‘21)
	○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개최 (‘18년 10회, ‘19년 11회, ‘20년 13회)	○ 열린소통포럼 활성화(‘21)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5개소 운영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신규 1개소 추가 조성(‘21)
	○ 「생애주기서비스」 통합제공 확대(2종→7종 - 온종일돌봄, 맘편한임신 등 5종 추가)	○ 생애주기 서비스 통합 제공 지속확대(16종/~’22)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1차 구축 (‘19.12) 및 2차 서비스 확대(‘20.12)	○ 전자증명서 서비스 지속 확대(300종/~’21)
㉕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민원상담365 및 지능형 국민비서 1단계 구축사업 추진(‘20.7~)	○ 국민비서 서비스 개시(‘21.3)
	○ 모바일 신분증 구축사업 추진(‘20.7~)	○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21.1), 운전면허증 시범도입(‘21.12)
	○ 범정부 중장기 개방계획(‘19.2)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지속 확대	○ 14.2만개 공공데이터 개방 (누적,~’21)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20.6), 시행(‘20.12)	○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설치(‘21)
	○ 매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로 안전 위험요인 개선(‘17년·’18년·’19년·’20년)	○ ’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21)
	○ 민간 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19.2) 및 인증기관 지정(‘19.3)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대책 추진(계속)
㉖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 ’19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결과 공시(‘20.4)	
	○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수립(‘20.1)	○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개정(‘21. 6)
	○ 「어린이안전법」 제정(‘20.5), 시행(‘20.11)	
	○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안전기본 법안」 제정안 발의(‘20.11)	○ 「안전기본법」 입법 추진 (‘21)
	○ ’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계획 수립·추진(‘20.2~’21)	○ ’21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추진(‘21)
	○ 청와대·중대본·관련부처 지휘·조정·통제관계에 관한 역할 재정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 전면개정(‘19.12)	○ 위기관리 매뉴얼 미비점 지속 보완(계속)
㉗	○ 중대본 공동차장제 최초 도입·운영	○ 재난상황(종류·규모 등)을 고려, 단계적 대응(계속)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 1·2단계 준공(‘19.9, ‘20.9), 3단계 착공(‘20.6)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 3단계 준공(‘21.3)
	○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 산업 진흥법」 제정안 발의(‘20.11)	○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입법 추진(‘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확대 및 접경 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 '17년 2회, '18년 4회, '19년 4회 ○ 안전한국훈련* 민간 참여 및 어린이 재난안전** 훈련학교 확대 * '18년 1,013개, '19년 1,166개 ** '18년 34개, '19년 46개, '20년 9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실시('21년 4회) 및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계속) ○ 안전한국훈련* 및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학교 확대 * '21년 1,330개 ** '21년 200개교
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19.12, '20.7) ○ 시도지사 간담회 운영('17~'20년 1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추진('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21.1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관계법률 및 하위법령 정비('2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19.7~)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2) 및 하위 시행령(30개) 개정('20.9) ○ 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 설치 관련 지방분권법('20.1) 및 시행령('20.5)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양사무 재원이전을 위한 보조금 교부('21년 행안부 균특회계 포괄보조금 증액 반영) ○ 지방일괄이양법(제2차) 법안 마련('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투표·소환법 개정안 발의('19.1, '20.12) ○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발의('19.3, '20.7) ○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확대('18년 47개 → '19년 408개 → '20년 62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추진('21)
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재정분권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비세 10%p 단계적 인상으로 지방재정 획기적 확충(연 8.5조원) - 국고보조사업(3.6조원)의 지방 일반사업 전환, 균형장치 마련(상생기금출연 등) - 소방안전교부세율 25%p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마련 및 관계법률 개정 추진('21) ○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추진('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17년 4.7% → '19년 3.7% / ** '17년 16.2% → '19년 13% ○ 주민참여예산제도 범위 확대(예산 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21~)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취약계층·청년·저소득층 등에 지역일자리 제공('20년 기준 35.6만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일자리 적극 창출('21~)
㉔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과기부 세종시 이전 완료('19) ※ 「행복도시법」 개정('17), 이전계획 변경고시('18.3) ○ 정부세종청사 설계완료('19), 착공('20.4~) ○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증액('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사 건립 추진(~'22) ○ 국회법 개정사항에 따라 세종의사당 설치추진('21~)
㉔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 **(어린이 안전)** 초등학교 3학년 강군은 이제 등굣길이 무섭지 않다. 집과 학교 사이에 교통사고가 잦은 4차선 도로가 있어 부모님과 함께 등교했지만, 등굣길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는 혼자 통학해도 안전해졌다. 속도제한 표지판, 과속방지턱, 무인교통단속장비(CCTV)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었고 학교 담장을 따라 안전 통학로도 조성되었다. '20년 6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가 활성화되자 도로변에 불법주차되었던 차량도 많이 사라졌다. 앞으로는 안심하고 신나게 통학할 수 있을 것 같다.
- **(원스톱 서비스)** 최근 둘째를 출산한 김씨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맘편한 임신' 서비스로 임신부 대상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고, 엽산과 철분 등 임신부에게 필수적인 영양제도 택배로 지원받았다. 첫째 때 남편과 함께 일일이 혜택을 찾아보고, 서류를 발급받고, 보건소를 방문해야 했던 과정이 모두 사라진 셈이다. 출생신고도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수했고, 양육수당 등의 출산 서비스도 정부24의 '행복출산' 서비스로 한 번에 받았다.
- **(지역사랑상품권)** 세종시에 사는 박씨는 요즘 지역사랑상품권을 왜 진작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한다. 포인트처럼 충전해 카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때마다 10%씩 적립되니 돈을 버는 기분이다. 예전엔 다른 지역까지 가서 소비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덕분에 지역 내 소비할 곳을 찾아서 우리 동네를 구석구석 찾아다니니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도 커지는 것 같다. 얼마 전 방문한 동네 가게 사장님도 지역사랑상품권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낮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 '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 **(원스톱 서비스)** 아이 셋을 키우는 신씨는 얼마 전 발표한 정부보조금 소식을 듣고, 자연스럽게 정부24 홈페이지의 '보조금24'로 내용을 확인했다. 작년까지는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여기저기 물어보고, 신청 절차를 찾아봐야 했는데, 이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수혜서비스 대상자 여부 확인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해졌다. 조만간 각 자치단체의 보조금까지 포함해 서비스해준다니, 찾아가는 정부서비스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 **(어린이 안전)** 춘천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홍씨는 얼마 전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크게 다쳤는데, 올해부터 의무화된 응급처치 교육에서 배운 실습과 행동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한 덕분이다. 이제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받은 대로 대처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 **(자치경찰)** 박씨는 얼마 전 치매로 길을 잃은 어머니를 경찰과 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조례 개정으로 동네 파출소와 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가 연계된 덕분이다. 홀로 있는 어머니를 지역 경찰이 발견하여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보호해줬고, 어머니의 정보 또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집까지 모셔주었다. 이제 경찰만 보면 마음이 든든해진다.